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정성수 · 김재금* · 김훈호** · 오세희†

(인제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대학교 · † 인제대학교)

A Study of Teachers' Perception on the School Autonomy Policy

Sung-Soo JUNG · Jae-Kum KIM · Hoon-Ho KIM · Se-Hee, OH†

(Inje University · *MEST · **Seoul National University · † Inj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 teachers' perception on the School Autonomy Policy and to give some suggestions for better settlement of the policy.

To achieve the above aim, we used survey method to 390 teachers and analyzed 363 responses with SPSS program.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Most of teachers supported the intent and aim of the School Autonomy Policy, however, the respondents showed conflicting responses on the contents, process, core subject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In other words, respondents who have more teaching career including principals answered positively on the policy and it's process than lower career teachers. Lower career teachers expressed very negative recognition and little understanding for the policy itself.

From the result of the survey, it could be suggested that the teachers' cooperation, especially lower career teachers' conciliation, is very important to settle down the School Autonomy Policy successively.

Key words : Autonomy, School Autonomy policy, School Based Management, Accountability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학교개혁은 단위학교와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와 교사에게로 권한의 이임과 위양, 자율성 확대, 책무성 강화 등을 이전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침을 정비할 목적으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2008.4.15)하

여 29개 지침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후 수많은 지침을 일일이 검토하고 폐지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11월에는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침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일괄 정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2009학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의 존치 지침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자율화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 정

† Corresponding author : 055-320-3131, shoh@inje.ac.kr

* 이 논문은 2009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주체가 되는 하향식 개혁으로 인해 학교자율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종래의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체제, 획일적이고 폐쇄적이었던 학교운영, 공급자중심의 평균화 지향 위주의 교육활동을 비판하면서 학교현장에 자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수없이 있어왔고(Quinn, 1984; Rich, 1986; 김창걸, 1986; 나병현, 1994; 김영철, 1994; 허병기, 1997; 정태범, 1998; 박우진, 2004), 이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논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히려 자율의 개념이나 철학적 논의에 근거한 진정한 의미, 왜 자율이 필요한가 등과 같은 논의보다 이제는 단위학교와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제적인 방안과 처방을 제시하는 현실적인 연구가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자율과 관련한 종래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학교자율화는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학교교육 체제가 점점 확대되고, 교육재정의 투입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질관리 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Carnoy & Levin, 1985)됨에 따라 학교교육 구조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Murphy, 1993).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중앙집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Lunenburg & Ornstein, 1996), 분권화를 통한 학교 자율성의 확대가 중요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rown, 1991; Fiske, 1996; 이종재 외, 2003). 그리고 학교 자율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문적 경영기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데 학교단위책임경영제가 바로 그것이다(김홍주, 2008).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교육청에 의한 규제 및 지시 중

심의 학교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교육청이 갖고 있던 권한을 단위학교에 부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그 책무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David, 1989; Murphy & Beck, 1995),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학교단위책임경영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홍관석, 1999; 신재철 외, 2003; 김홍주, 2004; 박우진, 2004; 김성열 외, 2005),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학교자율화의 주요 내용들이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면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자율화의 주요 내용, 특성, 쟁점과 나아가 학교 자율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학교자율화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를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정제영, 2008; 고 전, 2008; 김홍주, 2008; 박상완, 2008). 하지만 학교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인식 분석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현장 교원들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자율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특정 교원단체에서 단편적으로 실시한 찬반조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 추진과정, 기대결과 등 주요쟁점에 대하여 초·중등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향후 학교자율화가 현장에 정착되기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자율화에 대한 교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자율화의 핵심추진주체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기여 정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폐지 지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학교자율화의 주요 쟁점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체제적 관점에서 크게 목적, 내용과 방법, 기대 결과 측면에서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쟁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목표: 기본방향 및 취지

사실, 학교자율화는 그 동안 학계와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또한 그 도입이 주장되어온 주제였다(김홍주, 2008). 다만, 그 취진이 미흡하였기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의 세부추진 계획으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이 발표되었고, 1단계 조치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 것이다. 나아가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지침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일괄정비하는 방법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즉, 학교자율화를 통해 단위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운영 등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지침 등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행사하던 결정권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자치의 고도화와 동시에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는 것이다(정제영, 2008). 이와 같은 기본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입시위주 교육의 심화, 우열판별성, 학생들의 고충 가중 등 상당한 반대가 있었으나(정제영, 2008)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 내용과 방법: 폐지 지침의 적절성과 현장 의견 반영 정도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학습 평가, 교원, 교육과정 운영, 생활진로 지도, 학사학적 관리, 기타 등 총 29개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학교의 결정권 확대,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역할의 재설정 등이다.

<표 1>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1단계 내용: 29개 즉시 폐지 지침 현황

분 야	내 용
교수·학습 평가(6건)	계기교육시행지침, 학업성적관리대책, 학생정보소양인증제시행계획, 학습부교재선정지침, 시설모의고사 참여금지지침, 교과교육연구활동 운영계획
교원 분야(5건)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처리지침, 계약제교원운영지침, 교원연수운영기본계획, 촌지수수금지계획, 교원의 대학원수강업무처리요령
교육과정 운영(7건)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지침, 방과후학교운영계획,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철저, 수능이후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방안, 독서는술교육활성화계획, 교육과정운영기본계획, 학교체육 기본방향
생활진로 지도(5건)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방안, 교복공동구매지침, 봉사활동운영지침, 학교안전교육활성화방안, 학교안전교육계획
학사학적 관리(3건)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초·중·고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기타(3건)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 초·중등 주요업무계획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기로 한 1단계 조치, 각종 법령정비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2단계, 마지막으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지원하는 3단계로 제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새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2월 말에 출범한 것을 고려하면 불과 1달여 만에 발

표한 계획이었다(정제영, 2008).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이후 불합리한 지침의 정비를 계속 추진하였으나 수많은 지침을 일일이 검토·폐지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침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일괄정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전수 조사한 후 교육청과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515개 지침 중 188건(36%)만 존치하고 나머지 327개 지침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였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존폐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이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지침의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2009학년도부터는 교육청의 존치 지침 외에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하지만 이 같은 방법과 절차상의 변경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실증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단위학교는 배제된 채 거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청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기대 결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기여 정도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 및 후속 조치들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행정부담 경감 및 자율성 확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증대 및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의 실질적 보장 등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즉,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지침위반으로 인한 감사 처분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경직적이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지만 향후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할 수 있고, 교육수요자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알 권리 보장과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앞에서 논의한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교원들의 인식 수준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8년 7~8월 동안 서울대학교 중등 교장자격연수에 참여한 교감 및 장학사 134명, 서울대학교 교육행정 지도자과정에 참여한 14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장 45명 및 경남지역 교감자격연수에 참여한 교사 272명 등 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9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회수율은 86.7%였으나, 응답이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63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의 배경변인 부분과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설문지는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과 29개 즉시 폐지 지침들에 대한 의견 등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한 교원들의 찬성 정도, 절차의 적절성, 학교 현장의 의견 반영 정도 등을 Likert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교자율화 계획의 핵심적인 추진 주체와 학교자율화 계획의 실행이 실제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등의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두 번째 영역은 학교자율화 계획에 의한 즉시 폐지 지침 29개에 대한 교원들의 찬반 의견을 알아보았다. 응답자 363명 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수는 각각 46명과 317명으로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의 수가 다소 적은 편이어서, 학교급별 인식의 차이가 대표성을 갖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논의를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직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 교사가 214명으로 가장 많고, 교직경력에 따라서는 25년 이상이 188명으로 가장 많았

다. 각 변인별로 다소 편포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분석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본 연구가 갖는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2단계 학교자율화조치까지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과제 즉,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정도와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 ANOVA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도구로 SPSS 12.0을 사용하였다.

<표 2> 배경변인 및 설문 문항 구성 ()는 설문 대상 인원

변인	설문대상 및 측정 방법
학교급	초등(46)/중등(317)
현 직위	교장(40)/교감(96)/전문직(13) /교사(214)
배경 변인	10년 미만(59)
	10년 이상 ~ 15년 미만(24)
교직경력	15년 이상 ~ 20년 미만(40)
	20년 이상 ~ 25년 미만(52)
	25년 이상(188)
자율화에 대한 교원의 인식	찬성 정도 Likert 5점 척도
	절차의 적절성 Likert 5점 척도
	현장 의견 반영 Likert 5점 척도
교원 의견	학교경영자/일반교사/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수요자(학생·학부모) /기타
단위학교 자율성 신장 기여 정도	매우 획기적으로 기여/이전 보다 나아질 것/지역 교육청의 통제 강화로 큰 변화 없음/잘 모르겠음/기타
29개 폐지 지침에 대한 의견	찬성 / 반대

IV. 분석 결과

1. 학교자율화에 대한 교원의 인식

학교자율화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 보기 위해 우선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찬성 정도,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수립 절차의 적

절성 수준,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학교 현장의 의견 반영 정도 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교원의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표 3> 학교자율화에 대한 교원의 인식 ()은 %

변수명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찬성 여부	9 (2.5)	52 (14.3)	95 (26.2)	162 (44.6)	45 (12.4)	363 (100.0)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학교현장 요구 반영절차 유무	29 (8.0)	140 (38.6)	133 (36.6)	58 (16.0)	3 (0.8)	363 (100.0)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현장 목소리 반영 여부	27 (7.4)	126 (34.7)	144 (39.7)	64 (17.6)	2 (0.6)	363 (100.0)

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자율화 계획에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보인 교원은 전체의 57.0%로 나타난 반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교원은 16.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교원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46.6%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자율화 계획의 내용 또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4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자율화 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6.8%와 18.2%에 그치고 있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교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원들이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자율화 계획의 추진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 차이

교원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배경변

인을 학교급과 현 직위, 교직경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교직경력과 현 직위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47명의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 중 97% 정도가 교직경력이 20년 이상의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분석 결과에서 교장·교감·교육전문직 그룹과 일반 교사 사이의 인식 차이가 매우 컸던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교직 경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교직경력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에서는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반 교사 214명만을 대상으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1)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찬성 정도

학교급에 따른 교원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원들은 매우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학교자율화 계획의 시행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일수록 정책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높았다. 초등과 중등 사이의 평균 차이는 5점 만점에 0.4 정도였으며,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 4> 학교급에 따른 학교자율화 찬반 정도

학교급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확률
초등	3.17	0.90			
중등	3.55	0.97	-0.37	-2.47	0.01

현재의 직위에 따른 학교자율화 계획 찬성 정도를 살펴보면, 교장과 교육전문직의 찬성 수준이 4.23으로 가장 높았다. 교감 또한 주로 찬성 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교사들은 학교행정이 혹은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적은 편이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고려하면,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직위

에 따른 ANOVA 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 집단 사이에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을 한 집단으로 묶을 수 있으며, 교사는 이들과는 성격이 다른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교직경력이 높아질수록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교사들의 찬성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찬성 정도가 가장 높았다. 교직경력에 따른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 검증 결과 교직경력 15년을 기준으로 학교자율화에 대한 찬반 인식이 뚜렷이 나뉘고 있다.

<표 5> 현 직위 및 교직경력에 따른 학교자율화 찬반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교장	4.23	0.66			
현 교감	3.93	0.76			
직 교육전문직	4.23	0.60	33.82	0.00	a,b,c*d
위 교사	3.13	0.94			
합계	3.50	0.97			
10년 미만	2.75	0.82			
교 10년~15년	2.63	1.01			
직 15년~20년	3.35	0.86	28.604	0.00	a,b*c,d,e
경 20년~25년	3.46	0.92			
력 25년 이상	3.89	0.81			
합계	3.50	0.97			

* Scheffe 사후검증의 a, b, c, d, e는 현 직위 및 교직경력의 구분 순서임(이하 동일).

2) 학교자율화 추진 과정의 학교 현장 요구 반영 여부

학교자율화 계획의 추진 과정에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원들이 중·고등학교 교원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한 찬반 의견과 비슷한데, 학교자율화 계획 추진 과정의 학교 현장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교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한 찬성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인식 차이는 각각 0.1, 0.24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6> 학교급에 따른 학교자율화 추진 과정 현장 요구 반영 여부 정도

학교급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확률
초등	2.52	0.86	-0.12	-0.91	0.37
중등	2.65	0.88			

학교자율화 계획의 추진 과정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느냐는 질문에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2.92점에 그쳤으며, 교장과 교감이 각각, 2.78점, 교사가 2.52점이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고려할 경우, 상당수의 교원들이 학교자율화 계획의 추진 과정 상 학교현장의 의견 반영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도 일반 교사들의 부정적 시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선 찬성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고려해 볼 때, 일반 교사들의 이러한 인식은 학교자율화에 대한 찬성 정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직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네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heffe 사후검증에서는 세 집단이 동일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F분석과 t-test의 계산 방법 차이가 만들어 낸 결과로, 세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매우 미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7> 현 직위 및 교직경력에 따른 학교자율화 추진 과정 현장 요구 반영 여부 인식 차이

현직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교장	2.78	0.80			
교감	2.78	0.78			
교육전문직	2.92	0.86	3.02	0.03	
교사	2.52	0.91			
합계	2.63	0.87			
10년 미만	2.32	0.80			
10년~15년	2.08	0.83			
15년~20년	2.68	0.92	5.86	0.00	a,b*e
20년~25년	2.67	0.90			
25년 이상	2.78	0.84			
합계	2.63	0.87			

학교자율화 추진 과정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직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 교사들의 만족도는 2.08점으로 전체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많아질수록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작아지고는 있으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직경력 25년 이상 교사들의 점수조차 2.78점에 불과하였다. 교직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나 2개 정도의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3)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내용의 학교 현장 요구 반영 여부

학교자율화 계획의 내용에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초등과 중등 교원들의 만족도는 각각 2.48과 2.72에 불과했으며, 이는 학교자율화 계획의 내용에 대해 상당수의 교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교원들이 중등 교원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0.24에 불과하여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8> 학교급에 따른 학교자율화 내용 현장 요구 반영 여부 정도

학교급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확률
초등	2.48	0.86			
중등	2.72	0.86	-0.24	-1.79	0.07

현 직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교사는 이들보다 다소 낮은 2.5점에 불과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현 직위 및 교직경력에 따른 학교자율화 내용 현장 요구 반영 여부 인식

현직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교장	3.03	0.80			
교감	2.96	0.83			
교육전문직	2.92	0.95	9.63	0.00	a,b*d
교사	2.50	0.84			
합계	2.69	0.87			
10년 미만	2.27	0.72			
10년~15년	2.17	0.76			
15년~20년	2.50	0.88			
20년~25년	2.83	0.90	9.94	0.00	a,b*d,e
25년 이상	2.89	0.83			
합계	2.69	0.87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교사들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직 경력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내용의 학교 의견 반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25년 이상 경력의 교사들조차 점수가 2.89점에 머무르고 있어, 교직경력에 관계없이 교원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자율화 계획의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학교자율화 핵심 추진 주체 및 단위 학교 자율성 기여 정도

학교자율화의 핵심 추진 주체 및 단위학교 자율성 기여 정도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각 결과는 학교급, 현 직위, 교사의 교직경력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가. 기술통계 결과

학교자율화의 핵심적인 추진 주체에 대해 전체 교원의 42.15%는 일반교사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경영자 34.7%, 교육수요자 14.3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학교자율화 계획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이 아닌 단위학교 교원이나 교육수요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학교자율화의 핵심 추진주체에 대한 인식 ()는 %

학교	일반	교육과학기술	교육청	수요자	기타	합계
경영자	교사	기술부				
126	153	3	13	52	16	363
(34.71)	(42.15)	(0.83)	(3.58)	(14.33)	(4.41)	(100.00)

한편, 학교자율화 조치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원의 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64%의 교원들은 학교자율화 조치의 시행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는 약해질 수 있으나, 교육청으로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결국 단위학교 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학교자율화의 단위학교 자율성 기여 정도에 대한 인식 ()는 %

획기적	이전보다	중양	통제	모르	기타	합계
로 기여	나아질것	약화	및	겠음		
		교육청	통제			
		강화				
16	166	133	39	9	363	
(4.41)	(45.73)	(36.64)	(10.74)	(2.48)	(100.00)	

나.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 차이

1) 학교자율화의 핵심 추진 주체

학교경영자와 일반교사 모두가 단위학교의 구성원임을 고려하면, 초등과 중등 모두 약 75%의 교원들이 단위학교가 학교자율화 추진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이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3%와 14% 정도로, 일부 교원들의 경우 학교자율화 추진에 학부모와 학생 등이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초등과 중등 모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2> 학교급에 따른 학교자율화 핵심 추진 주체 인식 차이 ()는 %

구분	학교 경영자	일반 교사	교과 부	교육 청	수요자	기타	계
초등	7 (15.22)	27 (58.70)	1 (2.17)	2 (4.35)	6 (13.04)	3 (6.52)	46 (100.00)
중등	119 (37.54)	126 (39.75)	2 (0.63)	11 (3.47)	46 (14.51)	13 (4.10)	317 (100.00)
계	126 (34.71)	153 (42.15)	3 (0.83)	13 (3.58)	52 (14.33)	16 (4.41)	363 (100.00)

* $\chi^2=11.03$, $df=5$, $p=.05$

그런데 초등은 58.7%의 교원이 일반교사가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등은 학교경영자라는 응답과 일반교사라는 응답이 각각 37.54%, 39.75%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초등과 중등의 응답자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초등교원만을 추출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 응답자의 대부분이 일반교사이기 때문에 학교경영자보다는 일반교사가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교직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

한 것이다. 교직경력 20년 미만의 교원 중 약 60%정도는 일반교사가 학교자율화 계획 시행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교직경력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교원들은 46.15%, 25년 이상 교원들은 27.66%만이 일반교사라고 응답하였다. 즉,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경영자가 학교자율화 조치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표 13> 교직경력에 따른 학교자율화 핵심 추진 주체 인식 차이 ()는 %

구분	학교 경영자	일반 교사	교과 부	교육청 수요자	기타	계
10년~ 미만	3 (5.08)	39 (66.10)	0 (0.00)	1 (1.69)	9 (15.25)	59 (100.00)
10년~ 15년	5 (20.83)	14 (58.33)	0 (0.00)	3 (12.50)	0 (0.00)	24 (100.00)
15년~ 20년	7 (17.50)	24 (60.00)	0 (0.00)	0 (0.00)	7 (17.50)	40 (100.00)
20년~ 25년	11 (21.15)	24 (46.15)	0 (0.00)	3 (5.77)	12 (23.08)	52 (100.00)
25년 이상	100 (53.19)	52 (27.66)	3 (1.60)	6 (3.19)	24 (12.77)	188 (100.00)
계	126 (34.71)	153 (42.15)	3 (0.83)	13 (3.58)	52 (14.33)	363 (100.00)

* $\chi^2=92.52$ $df=20$, $p=.000$

2) 단위학교 자율성에 대한 기여 정도

학교자율화 계획의 시행이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에 어느 정도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초등교원의 32.61%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등은 52.68%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시행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이 줄어들어 대신 교육청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 단위학교에서의 자율성 측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는데, 초등 교원의 47.83%와 중등 교원의 35.02%가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었다. 교차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교급에 따른 인식 정도 ()는 %

구분	획기적 으로 기여	이전보다 큰 변화 나아질것 없을 것	모르 겠음	기타	계	
초등	0 (0.00)	15 (32.61)	22 (47.83)	9 (19.57)	0 (0.00)	46 (100.00)
중등	16 (5.05)	151 (47.63)	111 (35.02)	30 (9.46)	9 (2.84)	317 (100.00)
계	16 (4.41)	166 (45.73)	133 (36.64)	39 (10.74)	9 (2.48)	363 (100.00)

* $\chi^2=11.23$, $df=4$, $p=.02$

위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초등과 중등의 응답자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교급과 현 직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초등 교원은 대부분 일반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중등은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 일반교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로 인해 초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일반교사들의 인식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는 교직경력에 따른 교원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교직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신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 25

<표 15> 교직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는 %

구분	획기적 으로 기여	이전보다 큰 변화 나아질것 없을 것	모르 겠음	기타	계	
10년 미만	0 (0.00)	11 (18.64)	34 (57.63)	12 (20.34)	2 (3.39)	59 (100.00)
10년~15 년	0 (0.00)	4 (16.67)	9 (37.50)	9 (37.50)	2 (8.33)	24 (100.00)
15년~20 년	1 (2.50)	18 (45.00)	19 (47.50)	0 (0.00)	2 (5.00)	40 (100.00)
20년~25 년	1 (1.92)	25 (48.08)	18 (34.62)	6 (11.54)	2 (3.85)	52 (100.00)
25년 이상	14 (7.45)	108 (57.45)	53 (28.19)	12 (6.38)	1 (0.53)	188 (100.00)
계	16 (4.41)	166 (45.73)	133 (36.64)	39 (10.74)	9 (2.48)	363 (100.00)

* $\chi^2=76.88$, $df=16$, $p=.000$

년 이상의 교원 중 64.90%가 학교자율화 이후 단위학교의 자율성 수준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한 반면, 교직경력 10년 미만의 교원들은 단지 18.64%만이 자율성 신장을 기대했으며, 57.63%의 교원들은 교육청의 권한이 확대되어 실제 단위학교 현장의 자율성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폐지 지침에 대한 인식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의 핵심은 29개의 즉시 폐에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폐지지침을 정하는 것은 학교자율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들이 실제로 29개 즉시 폐지 지침에 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부 지표들의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등의 학교행정이 집단과 일반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기술통계 결과

학교자율화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는 지침은 총 6개 영역 29개 지침이다. 교수·학습·평가 영역이 6개 지침, 교원 영역이 5개 지침, 교육과정 운영 영역이 7개 지침, 생활·진로지도 영역이 5개 지침, 학사·학적관리 영역이 3개 지침, 기타 영역이 3개 지침 등이다. 각 영역의 폐지 혹은 유지 필요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다음 <표 16>와 같다.

교수·학습·평가 영역에서는 학업성적 관리대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침 모두에서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성적 관리대책의 경우 전체 교원의 48.76%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교원분야에서는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처리 지침과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의 폐지가,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의 폐지가, 학사·학적관리 영역은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의 폐

지가 각각 60%대 중·후반의 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진로지도 영역과 기타 영역의 모든 지침은 80% 전후의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6> 29개 즉시 폐지 지침에 대한 인식

()는 %

분야	내용	폐지	유지필요	합계
교수 학습 평가	계기교육시행지침	273(75.21)	90(24.79)	363(100.00)
	학업성적관리대책	186(51.24)	177(48.76)	363(100.00)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시행계획	329(90.63)	34(9.37)	363(100.00)
	학습부교재선정지침	303(83.47)	60(16.53)	363(100.00)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지침	296(81.54)	67(18.46)	363(100.00)
	교과교육연구활동 운영계획	289(79.61)	74(20.39)	363(100.00)
교원 분야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지침	229(63.09)	134(36.91)	363(100.00)
	계약제교원운영지침	252(69.42)	111(30.58)	363(100.00)
	교원연수운영기본계획	283(77.96)	80(22.04)	363(100.00)
	초·중·고급지침	271(74.66)	92(25.34)	363(100.00)
교육 과정 운영	교원의 대학원수강 업무 처리요령	301(82.92)	62(17.08)	363(100.00)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지침	307(84.57)	56(15.43)	363(100.00)
	방과후학교운영계획	287(79.06)	76(20.94)	363(100.00)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철저	311(85.67)	52(14.33)	363(100.00)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방안	307(84.57)	56(15.43)	363(100.00)
	독서논술교육활성화	308(84.85)	55(15.15)	363(100.00)
	교육과정운영기본계획	229(63.09)	134(36.91)	363(100.00)
	학교체육 기본방향	306(84.30)	57(15.70)	363(100.00)
생활 진로 지도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방안	300(82.64)	63(17.36)	363(100.00)
	교복공동구매지침	285(78.51)	78(21.49)	363(100.00)
	봉사활동운영지침	299(82.37)	64(17.63)	363(100.00)
	학교안전교육활성화	289(79.61)	74(20.39)	363(100.00)
학사 학적 관리	학교안전교육계획	284(78.24)	79(21.76)	363(100.00)
	학사 지도 지침	246(67.77)	117(32.23)	363(100.00)
	초·중·고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	298(82.09)	65(17.91)	363(100.00)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309(85.12)	54(14.88)	363(100.00)
기타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293(80.72)	70(19.28)	363(100.00)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	304(83.75)	59(16.25)	363(100.00)
	초·중등 주요업무계획	281(77.41)	82(22.59)	363(100.00)

나. 학교행정이 및 일반교사 인식 차이 분석

학교자율화 계획이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장·교감·교육전문직으로 대표되는 학교 경영자 그룹과 일반 교사 그룹 사이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교원을 학교경영자 그룹과 일반 교사 그룹으로 구분하여 학교자율화 시행과 함께 즉시 폐지되는 29개 지침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면의 한계 상 29개 지침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교차분석 결과 학교경영자와 일반교사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지침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0% 이상을 차지한 지침들만을 분석한다.

다음 표는 교수·학습·평가 영역 중 계기교육 시행지침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폐지 의견이 75.21%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교경영자와 일반교사를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경영자 그룹의 43.62%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반 교사들은 88.32%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반대 반전평화수업, 제주 4.3학습, 국보법철폐 주장, APEC 바로알기 수업,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전교조 중심의 계기수업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왔으며, 이를 막으려는 교육당국 및 학교행정이 측과 이를 강행하려는 전교조 및 교사 측의 대립 양상이 그대로 반영된 응답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7> 계기교육시행지침에 대한 인식 차이

()는 %

구 분	폐지	유지필요	계
학교경영자	84 (56.38)	65 (43.62)	149 (100.00)
일반교사	189 (88.32)	25 (11.68)	214 (100.00)
계	273 (75.21)	90 (24.79)	363 (100.00)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다음 표는 학업성적 관리 대책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학업성적 관리 대책은 고사관리 및 성적처리 절차 등 학업 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지침으로, 학교경영자 측에서는 현행 유지를 바라는 비율이 61.74%로 절반을 넘고 있는 반면, 일반 교사들은 폐지 의견이 60.28%로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경영자 입장에서는 성적 관리의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명확한 규정과 이에 근거한 성적 관리를 더욱 희망하는 반면, 일반 교사들은 그러한 지침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육청 및 학교장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지에 오히려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학업성적 관리 대책에 대한 인식 차이 ()는 %

구 분	폐지	유지필요	계
학교경영자	57(38.26)	92(61.74)	149(100.00)
일반교사	129(60.28)	85(39.72)	214(100.00)
계	186(51.24)	177(48.76)	363(100.00)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휴직요건, 기간, 분할사용, 수당 등 기타 휴직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경영자의 56.38%와 일반교사의 67.76%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경영자 측에서 지침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해당 지침이 학기 운영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와 맞물려 있어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경영자 측에서는 휴직의 범위나 기간, 분할 사용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를 더욱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표 19>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에 대한 인식 차이 ()는 %

구 분	폐지	유지필요	계
학교경영자	84(56.38)	65(43.62)	149(100.00)
일반교사	145(67.76)	69(32.24)	214(100.00)
계	229(63.09)	134(36.91)	363(100.00)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은 기간제 교원과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학교경영자와 일반교사 모두 폐지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경영자 그룹은 일반교사들에 비해 현행 유지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인해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 계약제 교원의 임용사유 및 요건, 임용인원(정원 내 임용), 복무, 퇴직금, 경력인정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학교경영자 입장에서는 분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20>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대한 인식 차이 ()는 %

구 분	폐지	유지필요	계
학교경영자	90(60.40)	59(39.60)	149(100.00)
일반교사	162(75.70)	52(24.30)	214(100.00)
계	252(69.42)	111(30.58)	363(100.00)

매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기본 방침과 중점 추진 과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의 폐지에 대해 학교경영자와 일반교사 모두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지침의 유지를 희망하는 비율도 40%에 가까운데, 이는 학교경영자와 일반교사 모두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1> 교육과정 운영기본계획에 대한 인식 차이 ()는 %

구 분	폐지	유지필요	계
학교경영자	92(61.74)	57(38.26)	149(100.00)
일반교사	137(64.02)	77(35.98)	214(100.00)
계	229(63.09)	134(36.91)	363(100.00)

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 금지,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에 대해서는 학교경영자와 일반교사 모두 폐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경영자보다 일반교사들의 폐지 요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충수업이나 0교시 수업의 존폐와는 별개로 학교의 수업 및 일과시간 운영 등에 있어 단위학교 및 교사들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22>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에 대한 인식 차이 ()는 %

구 분	폐지	유지필요	계
학교경영자	95(63.76)	54(36.24)	149(100.00)
일반교사	151(70.56)	63(29.44)	214(100.00)
계	246(67.77)	117(32.23)	363(100.00)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초·중등 교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반 평교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원들이 학교자율화 추진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조사결과가 거의 없다는 선행연구(고전, 2008)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것이다. 하지만, 계획의 추진 과정이나 그 내용에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당수의 일반 교사들은 학교자율화 계획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또한 다른 교원들보

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직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학교 행정가일수록,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학교자율화 계획 및 추진 과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경력이 낮은 교사들일수록 추진과정이나 절차, 추진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자체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처한 직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고경력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자율화 계획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었을 때, 일반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교원들이라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자율화 계획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평교사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나아가 이들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자율화가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동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서 누가 더 핵심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학교경영자와 일반교사 사이에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의 경우 일반교사가 학교자율화 추진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초등교사들이 중등교사보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초등 교사들에 대한 연수 강화 등 초등현장을 좀 더 배려하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자율화 조치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즉시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상당수의 지침들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침들의 경우 한편으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현행 지침들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에 폐지보다는 현행 유지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계기교육 시행 지침이나 학업성적 관리 대책 등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경영자와 일반교사 사이에 뚜렷한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주도로 폐지 지침을 선정하여 일괄 시행하기보다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폐지와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학교자율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약 30%에 가까운 교원들이 학교자율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며, 학교자율화 계획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약 40%의 교원들이 확실한 자신의 판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자율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으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 과정 및 중간 결과들이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찬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장 교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등 향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추가적인 보완 노력 여하에 따라서 현장의 인식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2. 결론

최근의 학교개혁은 단위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단위학교의 분권화 및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한 자율화가 추진되어 왔음에도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자율화에 대한 이해 및 자율역량의 부족으로 제대로 착

근되지 않거나 체감할 수 있는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교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학교의 자율화에 대한 이해와 자율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학교자율화의 중심은 교원이며, 교원이 학교자율화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교사 등 학교를 둘러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행동을 수반할 때 학교자율화는 가능하다.

그 결과 학교자율화에 의해 단위학교는 보다 확대된 자율성 속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이 제고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개별학교들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과 아울러 자율화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적절하고 명확하게 제시해 나감으로써 학교자율화 정책의 순응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승희·김창숙·황순영(2008). 어린이집 실의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수해양교육연구*, 20(2), 309~322.
- 고전(2008). 학교 자율화 정책의 특성과 과제: 5·31 교육개혁에서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까지, *초등교육연구*, 21(3), 199~221.
- 교육과학기술부(2008a).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교육분권화추진팀*.
- 교육과학기술부(2008b).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조성을 위한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안), *교육분권화추진팀*. 보도자료.
- 김성열 외(2005). 학교운영 자율성·다양성 제고 방안 모색 및 제도화 지원에 관한 연구, *경기도 교육청*.
- 김영철(1994). 학교와 교육행정기관간의 자율과

- 통계. 교육행정학연구, 12(1), 29~52.
- 김창걸(1986). 교육운영의 자율화. 교육학연구, 24(3), 51~64.
- 김홍주(2004). 학교지원 중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주(2008). 초·중등 자율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KEDI 창립 제36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 나병현(1994). 교육의 자율성: 문제의 양태와 이론적 근거 탐색, 교육학연구, 32(1). 151~168.
- 박상완(2008). 자율화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교육의 진단과 과제, 2008년도 제53차 교원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 박우진(2004). 학교경영에서의 통제성과 자율성, 교육행정학연구, 22(4). 67~84.
- 신재철 외(2003). 교육개혁조치에 따른 학교의 자율적 경영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2), 329~357.
- 이종재 외(2003). 학습하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 교육공동체형성과 지식기반사회 교육체제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 원효현 · 김귀순(2005). 제7차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교사의 인식 분석, 수해양교육연구, 17(2), 260~269.
- 정제영(2008). 학교자율화의 쟁점과 주요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6(2), 415~435.
- 정태범(1998). 학교교육의 구조적 개혁, 서울: 양서원.
- 정호표(1997). 학교교육에서 자율성의 준거와 개발 방안, 교육철학, 15, 415~435.
- 허병기(1997). 교육행정에서의 자율과 통제 주장의 논리, 교육행정학연구, 12(1), 1~21.
- 홍관석(1999). 학교단위책임경영체제의 모형개발과 실천전략, 교육행정학연구, 17(2), 1~24.
- Brown, D. J.(1991).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or's guidebook to school district change, CA: Corwin Press, Inc.
- Carnoy, M. & Levin, H. M.(1985). Schooling and work in the democratic state. Palo Alto: Stanford.
- David, J. L.(1989). Synthesis of research on school-based management, Educational Leadership, 46(8), 45~53.
- Fiske, E. B.(1996).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Politics and consensu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Lunenburg, F. C. & Ornstein, A. C.(1996).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ncepts and practices,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Murphy, J.(1993). School-based management. Paper prepared for the North Carolina Educational Policy Research Center.
- Murphy, J. & Beck, L. G.(1995). School-based management as school reform: Taking stock, CA: Corwin Press, Inc.
- Quinn, V.(1984). To Develop Autonomy: a critique of R. F. Deardon and Two Proposals.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18(2),.
- Rich, J. M.(1986). Autonomy and Purposes of Schooling,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18(2),

-
- 논문접수일 : 2009년 09월 22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09년 11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3일